

Issue Brief

#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이 주는 시사점

February 2024 · 삼일PwC경영연구원



삼일회계법인

## Contents

1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주는 의미	03
2	예산안 분야별 영향	05
3	202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06
4	2024년 정책 경제정책 방향이 주는 4가지 시사점	07

#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이 주는 시사점

## 1.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주는 의미: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 2024년 정부 예산(최종안) 확정: 총수입 612.2조 원, 총지출 656.6조 원으로 확정
- 정부 추정 2024년 국세수입은 367.4조 원

2024년 재정운용 계획 (단위: 조 원)

	2023년	2024년		증감	
	본예산	정부안	최종안	국회 증감	전년 대비
총수입	625.7	612.1	612.2	0.1	(13.5)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7.9
관리재정수지	(58.2)	(92.0)	(91.6)	0.4	(33.4)
통합재정수지	(13.1)	(44.8)	(44.4)	0.4	(31.3)
국가채무	1,134.4	1,196.2	1,195.8	(0.4)	61.4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총수입은 세수입 +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세수부족은 국채 발행 및 기금운용 등으로 충당
- 경기둔화 및 자산 시장 하락에 따라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 축소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대비 약 6.1조 원 감소 예상되며, 기업 투자 활성화 방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역시 감소 예상

+ 그 외 종합부동산세, 인지 세입 등은 증가 예상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량 회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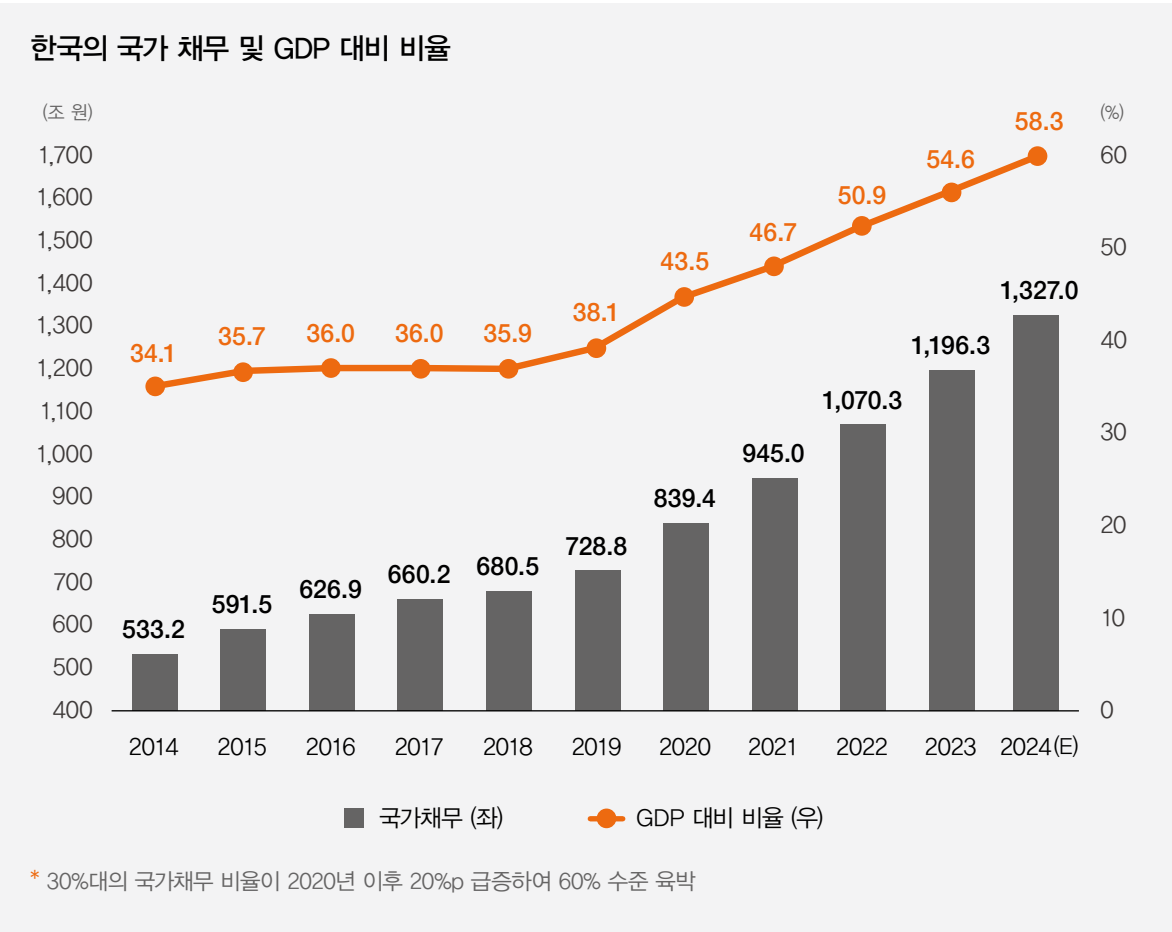
- 특히 국채 발행의 경우는 2024년 158.4조 원(순증 49.9조 원 + 차환발행 108.5조 원) 계획으로 전년 대비 7.3조 원가량 감소하고, 순증 규모 또한 11.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시장 공급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

+ 이는 코로나 이후 확대된 국채 발행량을 줄여 나가는 긴축 재정 기조 유지 (2021년 이후 감소세 유지)

- 한편, 세수입이 보수적으로 추산된 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내부지출용 36조 원 활용 여력을 고려했을 때 수입 측면에서의 추경 가능성 낮음

■ 2024년 총지출 예산(최종안)은 656.6조 원으로 2023년 638.7조 원 대비 +2.8% 증가

+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 증가율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정부의 대외 건전성 확보 의지 재확인 (2023년부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중)  
 + 2027년까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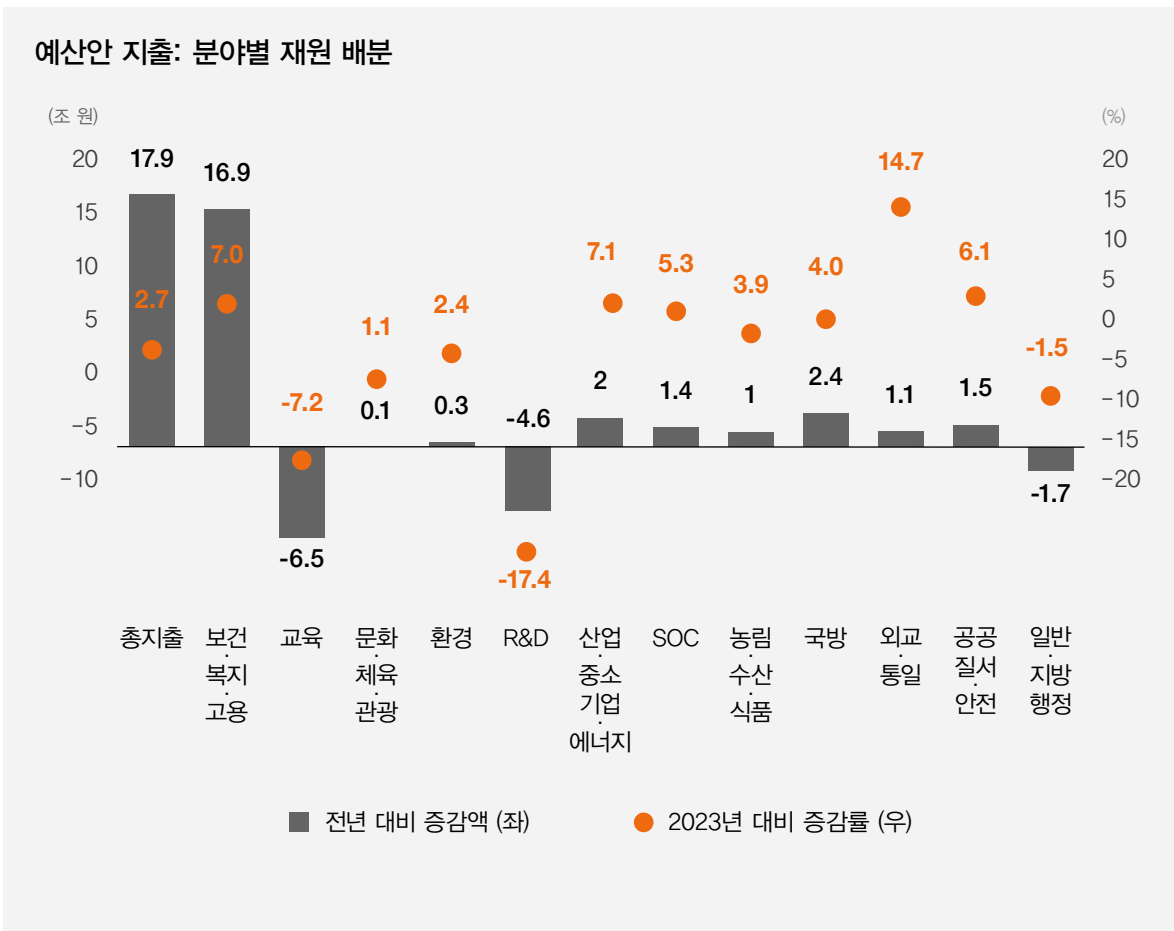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 2. 예산안 분야별 영향: 민생, 안보 및 안전 강조와 지출 효율화

### ■ 예산안(지출)의 분야별 자원 배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절대금액 측면) 총지출의 증가(17.9조 원)의 대부분(16.9조 원)이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투입
-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 외교·통일,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 안보 및 안전 분야 크게 증가

- + 외교·통일 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14.7%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7.1%), 보건·복지·고용 부문(7%)과 공공질서·안전(6.1%) 순임. 특히 에너지부문에서는 수력 대신 원자력 분야에 지원이 쏠리는 것이 특징적
- + 교육(-7.2%), R&D(-17.4%), 일반행정(-1.5%) 부문은 예산 감소
  - ① 교육: 학령 인구 감소로 유아, 초·중등 예산 감축 조정
  - ② R&D: 지출 효율화
  - ③ 일반 행정: 긴축 운영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3. 202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출 호조 & 물가안정

-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① 민생경제 회복, ② 잠재 리스크 관리, ③ 역동경제 구현, ④ 미래세대 정책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함
- 분야별 눈에 띄는 점은 물가안정,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관리,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연금개혁, 고용 보험 개편 등이 있음. 특히 잠재 리스크 관리가 눈에 띄

+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국내외 경기 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비교: 2023년 하반기 vs. 2024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Part 1 경제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투자 촉진</li> <li>•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li> </ul>	민생경제 회복	⊙ 잠재위험 관리
Part 2 민생경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li> <li>•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서민생활 안정</li> <li>•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li> <li>•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li> <li>•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PF 연착륙</li> <li>•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li> <li>• 공급망 안정 확보</li> <li>•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li> </ul>
Part 3 경제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li> <li>•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등</li> </ul>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Part 4 미래 대비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 대응</li> <li>•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생태계 강화</li> <li>• 공정한 기회 보장</li> <li>• 사회 이동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li> <li>• 인구·기후 위기 대응</li> <li>• 미래세대 기회 확대</li> </ul>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4. 2024년 정책 경제정책 방향이 주는 4가지 시사점

- ① 수출 중심 성장 ② 신성장 동력: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 ③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 집중, ④ 부동산은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부동산 PF 등)에 중점

### ① 정부의 관심 분야: 수출과 해외수주(방산, 인프라, 원전)

- 정부는 2024년 연간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 해외수주 750억 달러로 제시
- 정부는 수출 확대가 2024년 한국경제를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3% 수준으로 2023년과 유사하나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23년 0.9% 수준에서 2024년 3% 중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023년 -7.4%에서 2024년에는 +7~1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해외수주(방산, 인프라, 원전) 호조 예상: 연간 해외수주 목표치 2023년 \$350억 ... 2024년 \$570억으로 큰 폭 증가 예상

#### 방산, 인프라, 원전 분야 정부 지원책

구분	주요 정책
연간 수출 7천억 불 조기 달성 지원	무역금융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공급(2023년 345조 원)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해외수주 570억 불 달성 지원	2027년 해외건설 400억 불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추진
	(방산)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시, 세액공제율: 3~12% ... 6~18%</li> <li>•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2023년 20개소 ... 2024년 31개소</li> </ul>
	(인프라) 제2의 중동붐 확산을 위한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확대 등 밀착 지원 인프라 확충</li> <li>• 시공능력 평가 시 해외건설 고용 가점 및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li> </ul>
	(원전)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상반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Romania Cernavoda)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 수주 추진</li> </ul>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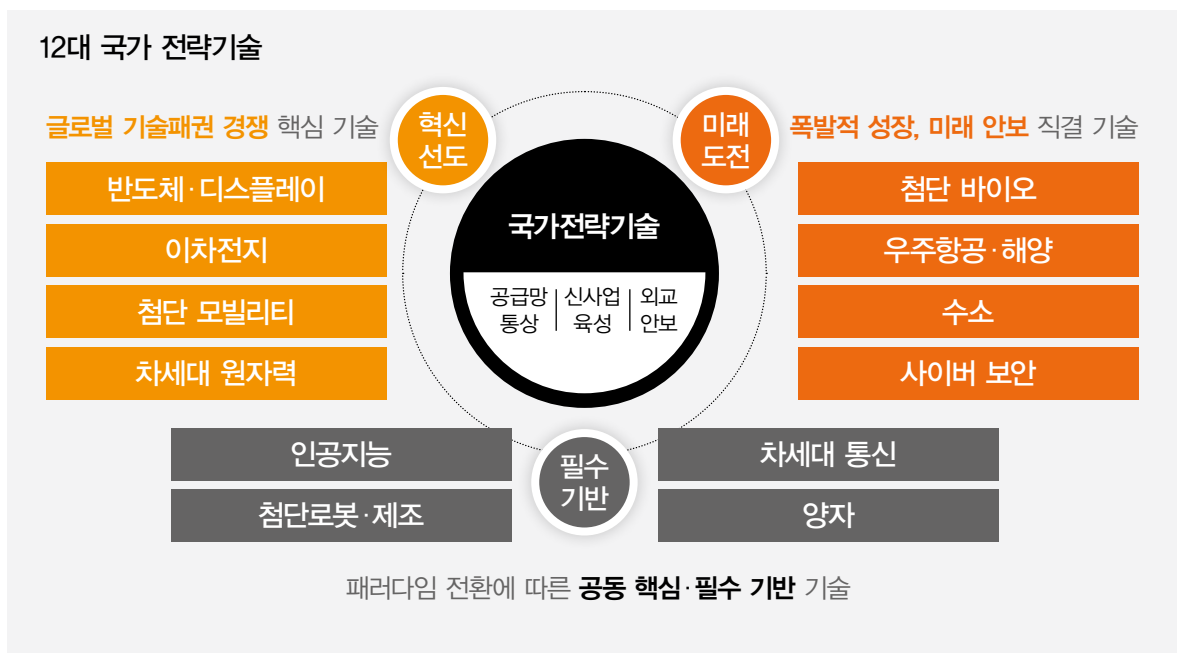
②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관심 분야(신성장 4.0 전략):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 반도체 외 신성장 관련해서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합리화' 정책 발표 예정으로 관심 지속
-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분기, 산업부), 사이버 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 조성(2분기, 과기정통부),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산업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적기 공급 방안 마련(하반기, 산업부) 등 신성장 4.0 전략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Appendix]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분야 선정 및 12대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분야 선정	
2023년	2024년 (추가)
시스템 반도체	시·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사이버 보안
미래 모빌리티	우주·해양
친환경·에너지	차세대 원전
로봇	양자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내수 소비 부진 인정하는 가운데 위기관리(물가안정 등) 필요: 적극적 내수 부양보다는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부담 완화 노력을 하는 만큼 내수 관련 산업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 높음**

□ 2024년 상반기까지는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 및 4월 10일 총선 등을 감안 시 민간 소비 회복은 쉽지 않을 듯

- + 정부 경비 감축 및 가계 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부진한 것도 소비재 산업 전망에 부정적 영향 예상
- + 특히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통신서비스,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분야는 정부의 가격 인상 제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산업은 다소 부정적일 수 있음

**물가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
2024년 1분기	공공기관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 평가에 반영	기재부
	다소비 의약품 가격 주기적 공개	복지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 (~2026년)	과기정통부
2024년 2분기	지자체 공공요금 가격 안정 인센티브 강화	행안부
	주요 생필품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 시 정보공개 의무 제도화	공정위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④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부동산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는 만큼 건설 부문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적을 듯**

- 2024년은 건설·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비관적 견해가 우위. 더불어 대규모 부양책도 부재한 상황임 →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의미

**건설투자 활성화·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시기	주요 정책	평가
건설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사업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 (2023년 25조 원 → 2024년 26.4조 원)</li> <li>• 공공부문 주택 공급 가속화 (주요 3기 신도시의 2024년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 추진)</li> </ul>	부동산 공급 측면보다 수요 부진이 문제 ∴ 해결 방안으로 부족
부동산 PF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 시장 위축 시 선제적 유동성 지원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히 시행)</li> <li>• 사업성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사업장은 LH 매입 정상화 검토</li> <li>• 사업성 일부 부족 시, PF 정상화 펀드(2.2조 원)을 통해 정상화 지원</li> </ul>	근본적 해결책 없음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경기대응환충자본 적립,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추진</li> <li>• (상호금융) 여신 한도 규제 시행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li> <li>•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채권 매각 대상 확대</li> </ul>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Author contacts

##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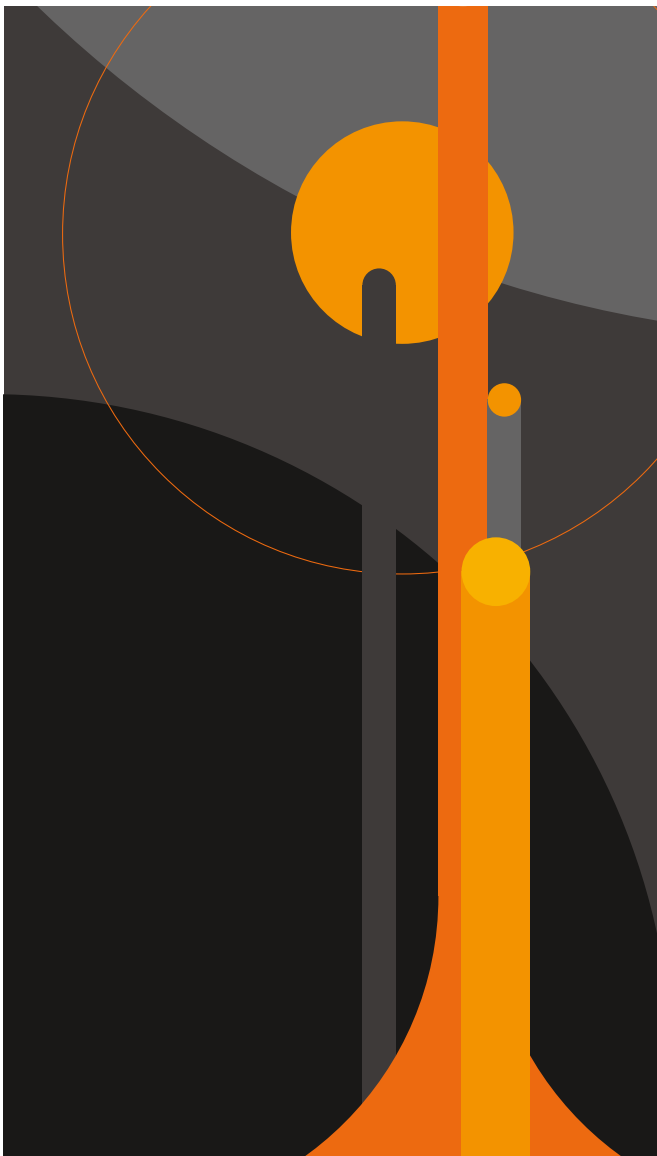
[eunyoung.lee@pwc.com](mailto:eunyoung.lee@pwc.com)

02-709-0824

강수정 연구원

[sujeong.j.kang@pwc.com](mailto:sujeong.j.kang@pwc.com)

02-3781-2325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2W-RP-011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